

노사관계 동향

노사분규 동향

◆ 노사분규 전년동기대비 대폭 감소

○ 2005년 6월 20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함(표 1 참조).

- 분규발생건수는 53건, 분규참가자수는 14,550명, 근로손실일수는 149,325일로 각각 전년동기 수치인 238건, 51,211명, 244,909일보다 크게 감소
- 이러한 감소는 임·단협 시기가 뒤로 늦춰지면서 생긴 현상임.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개소, 명, 일)

	2003. 6. 20	2004. 6. 20	2005. 6. 20
노사분규 발생건수(개소)	101	238	53
분 규 참 가 자 수(명)	22,986	51,211	14,550
근 로 손 실 일 수(일)	182,507	244,909	149,325

주: 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
자료: 노동부.

노동정책 동향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

- 노동부는 능력개발사업의 참여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일부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우선 직업능력개발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법인·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 규정하여 이들 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를 가능하도록 함.
 - 훈련과정 기간 및 시간요건을 현행 3일 20시간에서 2일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훈련실적’에서 ‘훈련실시능력’(담당인력, 연면적 18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변경함.

◆ 체불임금 보호제도 개선

-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일부 시행령을 신설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연이자제’를 도입하여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체불근로자가 임금·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고 소요비용은 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지원함.
 - 한편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해 주되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형사처벌제도는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양대노총, 비정규직 법안 관련 공동투쟁 선언

-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 반대 및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제안함.
 - 양대노총은 현행 여당안이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억제방안이 없고, 파견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없으며,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노사정 대화의 성과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을 좁혀나갈 것을 제안함.

- 이와 함께 국회가 일방처리를 시도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투쟁으로 저항할 것임을 밝힘.
- 또한 양대노총은 지난 6월 14일 집회현장에서 사망한 김태환 한국노총 총주지부장 사망 등과 관련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김태환 지부장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및 노동부장관, 행자부장관, 경찰청장 해임 등을 요구함.

◆ 한국노총, 조직혁신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한국노총은 6월 1일, 조직혁신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의 규약개정을 의결함.
 - 조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제 도입, 조합원 정보청구권 명시,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 대한 상급단체의 회계감사권 보장, 재정집행확인 통제관 도입, 맹비 미납시 회원조합의 권리 제한 등을 신설
 - 도덕성 강화를 위해 비리연루자 피선거권 제한, 노총 임원 재산공개, 간부윤리 강령 제정 등을 신설
 -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2백명당 1인씩 선거인단체도, 위원장-사무총장 러닝메이트제, 여성할당제 등을 도입

◆ 전경련, 불합리한 임·단협 조항 삭제 주장

- 전경련은 6월 20일, 『2005년 임·단협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조 스스로 불합리한 임·단협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촉구
 - 전경련은 이와 함께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동결(1,000인 미만 사업장은 3.9% 인상), 비정규직 문제의 시장을 통한 해결,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 및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 철회, 불가피한 고용조정에 대한 노조의 적극협조 등을 요구함.

주요노동일지

(2005. 5. 23~6. 20)

년·월·일	노동정책	노사단체	기업 및 노동조합
2005. 5. 23			· 울산건설플랜노조: 3보1배 행진 중 582명 경찰에 연행
5. 24		· 민주노총: 지도부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간담회 개최	· 금속노조: 엔텍지회: 임단협 결렬, 파업계속(5. 21~)
5. 25		· 울산건설플랜트 노사문제 해결 을 위한 공동협의회 개최	· 금속노조: 사용자단체 구성 촉구를 위한 4시간 부분파업
5. 26	· 한국노동연구원: '빚콕 네덜 란드 전 총리 초청강연회' 개최		· 전국자동차노련 인천시내버 스노조: 임단협 합의 타결 · (주)LG화학노사: 임단협 잠 정합의
5. 27		· 경남서부지역 노사정: 산업평 화를 위한 노사정공동선언문 채택	
6. 1		·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개 최, 규약개정 및 사무총장 선출	·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공동협 의회 1차 합의안에 대한 찬 반투표 실시, 가결
6. 3			· 금속노조 한보철강지회: 부 분파업(4. 24~) 중 단체협약 쟁점사항에 잠정합의
6. 8	· 한국노동연구원: 하도급 구 조와 고용관계 토론회 개최		
6. 9		· 민주노총: 대사용자 성실교섭 촉구 및 최저임금 82만원 쟁취 기자회견 개최	·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조 및 사용자: 중노위 조정안 수락
6. 12		· 화물통합노조(준): 전국화물노 동자대회 개최	
6. 14		· 민주노총: 비정규 권리보장 입 법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 결 의대회 개최	· 한국노총 총주지부장: 레미 콘 지입차추 결의대회 후 레 미콘 차량 출입금지 중 사망
6. 16		· 금속연맹: 비정규직 철폐, 산업 공동화 저지, 산별노조 강화 금 속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6. 17		· 양대노총: 공익위원 최저임금 조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 최	· 로템의왕노조: 공장이전 반 대 위원장 쇄사슬 농성 계속 (6. 1~) 중 쟁의행위 결의
6. 20		· 양대노총: 한국노총 총주지부 장 사망관련 기자회견 개최	